

# 광주·전남 싹쓸이에도 편치 않은 민주당

###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에 밀려 2위로 심장부 호남의 바다 정서 흔들 조짐 압도적 지지에도 늘 뒷전...공천과동도

‘정권심판론’의 거대한 쓰나미가 총선 정국을 덮치면서 4·10 광주·전남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광주·전남 18석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거머쥐면서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2연속 싹쓸이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심장부, 텃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결과였다.

하지만 민심의 속내를 한발짝 더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 중 핵심적인 지표가 비례대표 정당 투표 결과다.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비례대표 정당 투표 결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조국혁신당이 47.72%를 기록해 36.26%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연합을 무려 11.46%포인트나 앞섰다.

전남지역도 조국혁신당이 43.97%를 차지해 더불어민주당연합(39.88%)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기민비조’ 교차투표의 결과였다. 중요한 순간마다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었던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전략적 선택

이 어김없이 재현된 셈이다.

정권 심판을 위해 지역구는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지만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그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배경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인 호남의 정치구도상 유권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대안이 없는 지역구 투표에서 보수 정당이나 소수 진보정당, 무소속 후보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선거 때가 되면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부이자 어머니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늘상 ‘주머니 속의 공깃돌’ 정도로 여기는 행태가 되풀이돼온 점이 깔려 있었다.

지난 대선 때도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공허한 메아리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호남의 정치는 변방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국혁신당으로 이끈 데는 이번 민주당 경선 당시 빛이었던 공천과동도 한몫 했다.

/김도기 기자

### 전남 총선 당선인들 5·18 민주묘지 합동참배

제22대 총선 전남지역 당선인들이 12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합동참배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신정훈·이계호·서삼석·주철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김원이·조계원·김문수·권환엽·문규주 공동선대위원장은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과반 의석 확보에 큰 원동력이 됐다”며 “위대한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대적인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해 들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이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을 견제하고, 농어민 소득 보장과 잘 사는 농어촌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민주와 민생을 회복하고 호남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특히 더욱 낮은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정치, 정쟁이 아닌 일로써 승부를 보는 정치를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남도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는 합동참배 후 민주주의 문 앞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다.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  
오전 합동참배를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로 들어서고 있다.  
제22대 총선 전남 지역 당선인들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 민주 “채상병 특검법 5월2일 처리 계획...“국힘, 수용해야”

21대 국회 내 처리 목표...거부권 행사 못할 것”

21대 국회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달 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축소·은혜 의혹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오후 논평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이종성 호주대사 관련 특검 진행은 다음달 2일 처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아마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전체적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

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예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많은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일시에 기자회견을 예약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준엄한 정권심판의 큰 이음 중 하나인 채상병 순직 사외와, 관련 특검법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계획대로 다음달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된다면 총선에서 대패한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자 “이번 총선에서 진상 규명하라는 민의가 반영됐다고 보여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버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주도해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논평을 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력할 수 있지만 정국 주도권을 두고 경쟁관계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전망에 대해선 “경쟁이라고 보단 협조 관계로 봐야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175석이고 조국혁신당이 12석이다. 그런 관계로 봤을 때 협조, 파트너 관계지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 총선 후 첫 행보 22~23일 전주·광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 12명이 4·10총선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호남을 택했다.

조국혁신당은 14일 당선인 12명이 오는 22~23일 1박2일 일정으로 전주와 광주 등을 찾는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은 해당 지역을 방문해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고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약을 내세웠던 검찰독재 조기종식 등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도 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지난달 13일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와 함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전국 행보를 시작했는데, 당시 첫 방문지도 호남이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에 보내준 지지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자 호남을 방문키로 했다”라며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선명하게 쇄신으로 박차고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 총선 무효표만 130만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보다 2배 급증

19대 47만, 20대 66만표...21대 122만, 22대 130만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제21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정당 흡수’에 유권자 혼란이 극심해진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는 총 130만9931표로 집계됐다. 총 투표 수(2965만4450표) 대비 비율은 4.4%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122만6532표)보다 8만3399표(4.2%), 비율은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제20대·19대 총선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이번 총선 무효표 수는 제20대 총선(66만9769표, 2.7%)보다 2배 이상 많다. 제19대 총선(47만4737표, 2.2%)보다는 무효표 수가 3배 가량 많을 뿐만 아니라 비율은 2배 더 늘었다.

이유로는 제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목된다. 거대 양당부터 시작해 각종 비례정당이 난립한 결과 투표지가 길어지

고, 이에 유권자 혼란이 극심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는 51.7cm로 역대 최장이었다. 지난 총선 48.1cm 보다 3.6cm가 더 긴 수준이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34.9cm)도 넘었다. 이에 지난 총선부터 비례대표 투표는 전량 수개표가 실시돼 총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개표가 끝나는 불편도 초래됐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위성정당을 난립하게 하는 등 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중동사태 유가·환율 등 파급 예의주시” 尹, 긴급 경제회의...“공급망·물가 등 경제 영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법정부 차원에서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등을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대통령실로 불러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현지시각)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개시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와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중동 지역이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 “법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 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호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기업,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은 물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선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과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준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

### 윤, 비서실장 인선 ‘신중’... “더 검증해야” 야당 후보군 비판 고려한듯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내주 중반에 발표를 시사했다. 이르면 오늘(14일) 인선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이 일각에서 났으나 야당이 후보군에 대해 맹비난하자 이를 고려해 신중 모드로 전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후 언급된 비서실장 후보군의 인사 검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여론 동향을 살피는 중이다.

현재 야권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을 놓고 정권심판 민심에 역행하는 ‘돌려막기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선 개편의 내용과 폭도 속중이다.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참모진은 이른 시기에 교체하며 체신 의지를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사의를 밝힌 참모 중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의 사의는 정책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반려했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이 이르면 다음 주 중반, 늦으면 주말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한 게 11일이다. 인사 검증에 적어도 일주일만 필요하지 않겠냐”며 “체신도 좋지 않은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더 확실하게 검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들도 선거 패배 후 새로운 인사를 세우기까지 수일이 걸렸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야권의 반응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그런 인사 문제를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이 이번 192석을 확보한 법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선 야권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총선 결과를 보고도 전혀 느끼는 바가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관철승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총리 및 비서실장 후보군에 대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드리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만약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돌려막기 인사’ ‘촉진 인사’ ‘보은 인사’”라며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국 “尹에 하고 싶은 말 있다” 만남 요청 대통령실 “일단 내부 체제 정비부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22대 국회 제3당 중 대표 중 1명으로 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라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괴의자’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

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끝잡고 압살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 달성은 무산되었고, 국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공개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희망한다고 밝힌 데에 “내부 인적 쇄신이 먼저”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 쇄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내부 체제 정비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뉴스